

“농수산대 설치법 개정안 폐기”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 건의문 발표... 관리감독 철저 등 대책 요구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 이명연·전주1)는 19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농대 분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은 농수산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북도의회는 17일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특위는 한농대의 분교 설치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건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선, 국회(농해수위)에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근간을 흔

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농식품부)에 분교에 관한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등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교 논란의 시발점이 된 한농대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된 ‘멀티캠퍼스 조성계획’의 폐기 및 분교에 관한 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위는 추후 한농대 총장의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발의의원에게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 지역국회의원에는 개정안 폐기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 속한 지역국회의원인 김종희, 정운천, 박주현 의원 등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여 반드시 개정안을 폐기하고, 분교에 관한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한농대 분교 설치의 한농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생명산업을 특화로 기반을 갖춰가는 전북혁신도시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위배되는 명백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농식품부(한농대)에서 분교 설치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이춘석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입법과제 토론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

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현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십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 ‘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의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화이팅 외치는 문 대통령과 U-20 축구 대표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피파 U-20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희 의원, ‘농수산대 전북 설치 근거법’ 대표발의

“소재지 관련 불필요한 논쟁 종식, 청년농 육성 주력해야”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희 의원(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 지역 거점도시인 전북 전주시로 캠퍼



스를 옮겼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김종희 의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라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농대 전북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이었던 만큼, 소재지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많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설립 취지대로 젊은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위

“원전 안전대책, 정부 나서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중앙정부가 원전 안전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빛원전특위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한빛원전관련 위기대응체계 수립 및 대응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빛원전 관련 위기대응 체계 확립 및 방재시설·물품 확보 현황, 방사능 감시체계 및 방재역량 강화 등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한빛원전 관련 최근 이슈로 떠오른 지방세(지역자치시설세)법 개정 문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대응 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 국회·중앙부처 합동 방문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중앙 및 정치권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석기영 한빛원자력본부장이 참석, 한빛원전 운영 현황 및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김진성 기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美 대선 재선 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암웨이센터에

서 열린 출정식에서 2016년 대선 때 사용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다. /뉴시스

“아이 낳고 싶은 환경 ‘공공성 강화’로 해결을”

홍성임 도의원, 5분 발언서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도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아이 낳고 싶은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당, 비례)은 19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인구절벽 위기에 맞서고 있는 전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함께 출산율은 1.0명 이하, 출생아 수는 32만 명 수준 미만으로 오는 2022년 이전에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특이나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필요가 상당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돌봄을 위한 공공시설인 공공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